

김건희 씨 ‘까르티에 소장품전’ 전시이력, 해명도 모두 ‘거짓’

- 현안대응TF, 김건희 씨 까르티에 소장품전 전시 이력 및 윤석열 측 해명, 국립현대미술관 답변 통해 모두 ‘거짓’ 밝혀
- 김병기 단장,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김건희 씨 허위이력을 감추고 주가조작 등 범죄 비호에 혈안 돼 거짓말 일삼아… 대통령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TF(상임단장, 김병기 의원)는 국립현대미술관 답변을 통해 지난해 불거진 김건희 씨의 ‘까르티에 소장품전’ (이하 까르티에전) 전시 이력과 관련 의혹에 대한 윤석열 후보 측 해명 모두 거짓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씨의 회사 코바나컨텐츠는 2008년 열린 까르티에전에 참여한 바가 없음에도 해당 전시를 실적으로 홍보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윤 후보 측은 코바나컨텐츠가 까르티에전 홍보대행을 맡았던 업체를 인수하여 그 이력이 귀속되었으며, 미술관이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은 2019년 말-2020년 초 사이라고 해명했다.

까르티에 소장품전 의혹 관련 당시 윤석열 후보측 해명

윤석열 국민캠프 법률팀
2021년 7월 22일

오늘 김의경 국회의원이 제기한 ‘까르티에 소장품전’ 관련 전시 이력이 부풀려졌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닙니다.

2008년 전시된 ‘까르티에 소장품전’(2008.4.22.-7.13.)의 공동주최사는 까르티에와 국립현대미술관이며, 당시 위 소장품전의 홍보대행사는 ㈜맨인카후스입니다. 까르티에 브랜드를 보유한 리치몬드그룹의 한국법인 ㈜리치몬드코리아가 위 ㈜맨인카후스와 홍보대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코바나(대표이사 김건희)는 2009.9.2. ㈜맨인카후스와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 및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맨인카후스가 보유하고 있던 전시기획 및 홍보대행 영업 이력 또한 ㈜코바나로 모두 귀속되었습니다.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이 최근 3-4년간 코바나측에 계속해서 전시이력 삭제를 요청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삭제 요청을 한 시점은 2019년말-2020년초 사이 경이며, 위 요청에 따라 코바나컨텐츠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과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서 소장품전 관련 내용을 바로 삭제하였습니다.

그 동안 코바나컨텐츠는 문화예술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전시를 지속적으로 기획, 주관해 왔으며 전시 실적이나 이력을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사실관계 파악 없이 기자회견까지 자청하여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감입니다.

다만, 국민들께 성실히 설명드린다는 차원에서 관련 내용을 올립니다.

그러나 국립현대미술관의 답변에 따르면, 까르티에전은 기획 및 실행에 있어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티에사 외에 기타 제3자가 관여한 바 없으며, 코바나컨텐츠에 전시 이력 삭제를 요청한 시점 또한 2017~2018년경이다.

까르티에 소장품전 관련 국립현대미술관 답변

1. 2008년 ‘까르티에 소장품전’의 제임스 앤 데이빗 엔터테인먼트코리아/맨인카우스/맨인카후스/코 바나컨텐츠 주최/주관 여부

○ 해당 전시는 국립현대미술관과 까르티에사가 공동주최한 전시로서 기획 및 실행에 있어 양자가 직접 진행하였으며 기타 제 3자는 관여한 바 없습니다.

3. 2008년~2022년 1월까지 코바나컨텐츠에 ‘까르티에 소장품전’ 전시이력 삭제 요청한 내역

- 전시 이력 삭제 요청 방법, 요청 날짜, 공문이나 문서가 존재하면 해당 문서 제출

○ 2017~2018년경 유선상 삭제 요청하였습니다. 공문 또는 문서 등의 전시이력 삭제 요청은 없었습니다.

윤 후보 측이 2019년 말이라고 밝힌 전시 이력 삭제 요청 시점의 의도적인 거짓말 정황도 포착되었다. 윤 후보는 2019년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서면답변을 통해 까르티에전을 코바나컨텐츠의 주요 전시회 개최 내역으로 제출하였는데, 청문회 허위 답변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삭제 요청 시점이 청문회 이후여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현안대응TF 김병기 단장은 “허위이력에 대한 사죄는커녕 해명조차 뻔뻔하게 또 다른 거짓말을 내놓는 악질적인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을 감추고 주가조작 등 범죄를 비호하기 위해 공당까지 동원해 거짓 해명을 일삼는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